

## 나의 삶, 나의 길

---



### 안병영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36대 교육부 장관 (1995~1997),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KOSSREC) 회장, 아시아 사회과학연구협의회(ASSREC) 회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2003~2005) 역임 / 오스트리아 빈(Wien)대학교 정치학박사

저서 :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현대공산주의연구』,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론』,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공저),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공저) 등

# 나의 삶, 나의 길

안병영

## 1. 지난 세월, 모든 게 공부거리인 것을

내 뇌리에 각인된 생애 첫 번째 기억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해방 되던 날 서울 거리의 역동적인 모습이다. 1941년 9월생이니, 그때가 만으로 네 살 되기 얼마 전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떼 지어 돈암동 전차길 쪽으로 몰려가는 극적인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파도처럼 밀려가는 사람들의 물결, 그리고 거기서 분출하는 환희와 열광의 도가니가 어린 나에게 꽤나 충격적으로 감지되었던 것 같다. 앞뒤 없이 그 장면만 오롯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훗날 내가 엘리아스 카네티(Elias Canetti, 1905~1994)의 『군중과 권력』을 읽으면서, 내 뇌리에 불현듯 떠오른 것이 바로 그날 군중의 모습이였다.

나는 내 생애 첫 기억이 해방된 그 날이라는 사실에 얼마간 의미를 두고 싶다. 그래서 자각(自覺)의 차원에서 내가 진정한 ‘해방둥이’라고 늘 생각했다. 그때부터 내가 깨어난 의식 속에서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가 한글로 공부하고 한글로 글을 쓴 최

초의 한글세대였다는 점,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민주주의를 익혔다는 점에도 크게 무게를 두고 싶다. 그 후, 세월이 우수처럼 흘러 70여 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은 실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한국은 격세지감(隔世之感),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상투적 표현이 무색할 만큼 급변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경험한 온갖 영욕과 명암을 압축적으로 체험했다. 외세강점과 해방, 절대빈곤과 풍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향리문화와 글로벌리즘, 농경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천지개벽의 연속을 당대에 골고루 거쳤다. 나 자신도 그 격동의 세월과 함께 했다. 다섯 살 때 해방, 열 살 때 6.25 한국전쟁, 그리고 스무 살 때 4.19 혁명을 온 몸으로 겪으며 청년기로 접어들었다. 이후 청·장년기에는 한국 역사의 가장 역동적인 시간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단한 도정을 동행했고, 학계와 관계를 거쳐,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어 강원도 고성외진 시골에 와서 ‘인생 3모작’을 실험하고 있다.

내 평생 직업이 학자, 그것도 사회현상을 공부하는 사회과학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시(時), 공(空)의 차원에서 한 생애에 이처럼 질풍노도와 같은 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를 체험하며, 거기서 발효하는 온갖 현상과 의미를 학습, 고뇌, 탐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내 공부의 맥락에서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볼 때, 지난 70여 년의 세월은 엄청난 자극과 동기부여, 영감과 상상력, 숙고와 개안(開眼)의 원천이었다. 따지고 보면 고되고 신산(辛酸)한 세월이었지만, 그 삶의 여정이 내게는 최상의 공부거리였다. 그리고 이제 저만치 떨어진 국토의 변방에서, 그윽한 자연의 품속에서, 빈 마음으로

큰 세상을 내다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회과학자로서 나에게 넘치는 행운이다.

## II. 학문의 길에 들어서다

나는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다. 주위에선 수줍고 내성적인 내가 왜 딱히 그 전공을 택했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무척 많았다. 중학교 1학년부터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던 백광하의 명정치단평 「단상단하(壇上壇下)」에 빠져 밥은 걸러도 그 칼럼은 놓치지 않았던 기억이 남아있다. 그러나 정치라는 영역은 내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 나 스스로 직접 정치를 해 보겠다는 생각은 그 때나 그 이후에나 추호도 없었다. 내가 원래 권력추구나 승부사 기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치라는 거칠고 냉혹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일찍부터 정치가 우리의 삶에서 무척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절감했고,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예측하는 일이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대학 2학년 때 4.19를, 그리고 이듬해에 5.16을 겪었다. 4.19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창 솟구쳤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5.16 군사 쿠데타로 순식간에 무너져 엄청난 좌절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런 가운데 장준하와 함석헌의 『사상계』가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의 꽃대였다.

시대는 암울했지만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큰 방향은 쉽게 정해졌다. 내가 워낙 다른 재주가 없고 그나마 곧잘 하는 일이 글공부이니, 내가 할 일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는 내가 돈을 벌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일보다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 명분 있는 일을 좋아하니 사적 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함께 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내가 전공한 정치학이 쓰임새가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염두에 두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니 내가 갈 길은 학자, 언론인, 그리고 공직자 세 갈래였다. 이 셋 어느 것도 내 적성에 맞는 듯싶었고, 내심 얼마간 잘할 것 같은 자신감도 있었다. 궁리 끝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진학했다. 일단 거기서 학업을 이어 가면서 진로를 차분히 탐색해 보자는 심산이었다.

행정대학원에서 두 학기를 마칠 무렵, 나는 공부 쪽으로 내 길을 확정했다. 당시 서울대학교가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그 대학으로부터 도서지원을 받았는데, 신간 사회과학도서들이 대부분 행정대학원으로 왔다. 그런데 나는 당시 도서관장을 맡으셨던 안해균 교수님의 조교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의 최신 서적들을 매우 일찍, 그리고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난생처음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공부거리를 탐색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터득해 나갔다. 미국에서 갓 출간된 새 책을 첫 번째로 대출받아 밤 세워 읽으면서 느꼈던 희열과 지적 충만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멀고 힘이 들더라도 이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사람이 일생의 직업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조건, 즉 자신이 ‘특

히 잘하는 일', '제일 좋아하는 일', 그리고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일'이 함께 맞아 떨어질 때가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내게 학자 내지 교수라는 직업은 바로 그런 일자리다. 그러니 나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다.

### III. 오스트리아에 유학가다

아직까지도 내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유럽으로 유학을 갔느냐, 또 유럽 중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큰 나라가 아니고 동구 가까이에 있는 변방의 작은 나라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갔느냐는 질문이다.

내가 유학을 가던 1960년대에 우리에게 미국은 '외국'의 동의어였다. 따라서 외국유학하면 누구나 당연히 미국유학을 연상했다. 그런데 미국유학은 내게 처음부터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 모두가 대세라고 여기며 우르르 몰려가는데, 내가 무턱대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은 모든 문물에서 월등한 최강 국가라고 하지만, 역사와 학문적, 지적 전통이 일천(日淺)하고,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자유주의에 편향되어 있으며, 제도 실험의 경험이나 정책사례의 다양성도 떨어지기에 자연과학도라면 몰라도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굳이 그곳으로 유학을 가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유럽유학을 선호했다. 그러던 중 오스트리아에서 가톨릭계통의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선 시험과목이 독일어와 서양사였는데, 독일어는 고등학교

교 이후 손에서 떼지 않았고, 서양사는 워낙 어려서부터 즐겨 탐구하던 취미과목이라 내게 안성맞춤이었다.

무엇보다 오스트리아라는 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나는 일찍부터 ‘세기말(世紀末) 빈(Wien)’의 예술과 문화에 크게 매혹되어 있었다. 또 이 나라는 비록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제국에서 알프스 산간의 소국으로 전락했지만, 나치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1930년대 중반까지 의학과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논리학과 철학, 경제학과 법학 등 중요 학문분야 마다 고유한 학파를 형성하며 지성문화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던 나라가 아닌가. 특히 내겐 프로이트, 후설, 비트겐슈타인, 노이라트, 슈페터, 켈젠, 포퍼 등 20세기 인문사회과학분야의 가장 독창적인 이론가들의 찬란한 아이디어가 같은 시기에 ‘빈’이라는 한 도시에서 싹트고 영글었다는 것이 실로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그래서 나는 르네상스시대 피렌체에 비견되는 지성의 도시 빈에 가면, 분명 내게 엄청난 학문적 영감을 자극할 수 있는 신비의 샘이 있을 것만 같았다.

또 하나, 오스트리아가 당시 나를 사상적으로 크게 자극했던 것은 동서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나라가 기적처럼 성취한 ‘중립화통일’이었다. 냉전의 핵(核)지대로 4대 연합국에 의해 나뉘어 점령되었던 이 나라가 10년간의 끈질긴 정치협상에 의해 중립화통일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실로 냉전시대에 기록된 가장 반(反)냉전적인 레전드였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마치 천형(天刑)처럼 나를 옥죄는 냉전의 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상을 내다보고 무언가 통일을 향한 새로운 해결책이 섬광처럼 찾아올 것 같은 상념에 사로잡혔다. 그것이 한줄기 빛처럼 나를 고무하고 설레게 했다.

나는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실용학문인 행정학 보다는 정치사상과 같은 철학공부를 하고 싶었다. 또 그것이 유럽 학문의 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기능과 실천에 역점을 두는 실용학문에 매진했기 때문에, 이제 보다 본질적인 것, 특히 심오한 이론에 대한 갈증이 무척 컸다. 이 점도 내가 유럽을 선택한 중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 꿈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유학을 간다니 모두가 의아해 했다. “아니, 음악이라면 모를까!”, “미국 세상인데, 그곳에 다녀와서 어찌려고…”가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학문은 이미 학부와 대학원에서 그런대로 제법 익혔으니, 이제 구대륙 유럽에 가서 고전을 접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온갖 풍상을 다 겪은 숙성한 정신세계와 마주하고 싶다는 기대와 열망에 크게 부풀어 있었다. 마치 신대륙을 향해 먼 뱃길에 나서는 항해사의 웅골찬 결의 같은 것이 내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내 학문과 인생을 흔들어 놓을 창조적 영감이 샘솟고,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면서 분명히 나의 이러한 외로운 결단이 언젠가 내 학문과 삶의 양식에 긍정적 보상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1965년 10월 4일 나는 마침내 유학길에 올랐다. 3대 독자 외아들이 연세든 조부모와 부모님을 뒤로 하고 떠나는 발걸음은 무척이나 무거웠다. 후에 내 아내가 된 동갑내기 여자 친구에게 공부를 빨리 끝내고 오겠다는 빈말을 남겼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는 하늘에 별 따기 같은 일이었다. 떠나기 전날 저녁, 혜화동 로터리에서 그녀와 작별했다. 소슬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데,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가에 하늘하늘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나를 더욱 처연하게 만들었다. 그 후유증인가? 나는 아직도 10월 초 찬바람이 불어오면 예외 없이 슬픈 감정이 솟구쳐 가슴이 시려온다. 이 모진 ‘가을앓이’는 아마도 평생을 함께할 것 같다.

내가 유학했던 1960년대 후반의 유럽은 산업사회가 절정에 이르고, 지속적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확장, 계급 간 연대형성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복지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던 시기이다. 아직도 많은 이가 자주 추억하는 ‘굿 올드 데이스’였다. 전후 공황과 혼란 속에서 심신이 크게 위축되었던 나에게 모든 게 경이롭고 귀중한 학습 자료였다. 그런 가운데, 나는 1968년 4월 ‘프라하의 봄’과 5월 ‘68혁명’(파리 ‘5월 혁명’)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두 사건 모두 충격적이었고, 산 공부였다. 전자는 동구 공산주의체제에서의 자유화운동의 촉발제였고, 후자는 서구 자본주의체제의 변혁을 촉구하는 역사적 드라마였다. 전자는 공산주의체제가 이미 역사적으로 한계에 이르렀음을 웅변으로 증명했다. 나는 그때의 충격을 바탕으로 훗날에 출간한 『현대공산주의연구』(1982, 한길사)의 구상을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후자는 비록 혁명 자체는 실패했지만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그간 서구를 지배하던 기성권위구조, 애국주의, 종교 등 보수적 가치의 축을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등의 진보적 가치 쪽으로 크게 바꿔 놓았다. 실로 놀라운 변화였다.

나는 유럽에서 공부하는 동안 공식적 교육과정 못지않게 그곳,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와 철학, 문화와 생활양식,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을 익히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비교론적 입장에서 버릇처럼 유럽을 대서양 건너의 미국 및 내 나라 한국과 견주어 보면서 많은 것

을 사색하고, 학습하며, 고뇌했다. 나는 아직도 내 청년기 5년간의 유학생회가 나의 사유의 틀과 관점, 그리고 갖가지 대안 찾기 방식에서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랄 때가 많다. 내가 지난 2013년에 출간한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문학과 지성사)가 바로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짝튼 문제의식을 반세기 가까이 숙성시킨 결실이다.

유학을 갈 때는 홀몸이었는데, 귀국 길에는 네 식구가 되었다. 그곳에서 결혼해서 남매를 낳았다. 내 생애에 더 할 수 없이 값진 선물인 그 아이들이 벌써 오십 고개를 넘고 있다.

오스트리아 유학 후 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독일,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각각 1년씩 연구의 기회를 더 가졌다. 그때마다 나는 내 경험세계의 확장을 통해 내 학문적 지평을 넓혀 보려고 애를 썼다.

#### IV. 학자로 산 반세기

내가 시간강사로 처음 대학 강단에 선 것은 1965년 이른 봄이었다. 이후 1971년 초 유학에서 돌아와 1년간의 강사생활을 거쳐 한국외국어대학 행정학과에서 3년 반(1972년 3월~1975년 8월), 그리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32년(1975년 9월~2007년 2월)간 교단에 섰다. 정년 후 12년이 다가오지만, 나는 아직도 현역 학자라고 자부한다. 그 동안 나는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는 큰 기쁨을 누렸다.

나는 학자, 특히 사회과학자에게는 그의 생활철학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공부 속에 녹아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 사람의 기본 사유체

계를 알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그간 격동의 세월 속에서 반세기 이상 학자로 살면서 중시했던 철학과 가치는 무엇인지 돌아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이 집약되지 않을까 한다.

### ①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나는 늘 스스로 이념적으로 ‘중도개혁자’라고 자처했다. 그러면서 자유나 평등이라는 큰 가치 중, 어느 쪽에 극단적으로 몰입되기 보다는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지양(止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녔다. 나는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과잉을 우려했다.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정치는 교조화(教條化)되고, 정치사회나 지식인의 담론 구조도 이념의 소용돌이에 빠져 격돌만을 일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정책생산에는 소홀히 하게 되고, 민생정치와는 등을 돌리게 된다. 따라서 나는 급진적 변혁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지지했고, 이념적 대결보다는 합의와 상생을 추구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하며, 교육에서도 수월성과 형평성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나는 체제 안에 있어도 스스로 핵심이 아닌 주변에 터를 정하고, 늘 대안을 모색하며 비판적 지성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다. 말하자면, ‘unattached within’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자주 중도주의자의 고독을 반추하며 시대의 도도한 흐름과는 얼마간 다른 소리를 해 왔다.

### ② 자아준거성(自我準據性)

사회과학은 그 사회의 문화와 토양을 반영하는 학문영역이다. 따

라서 사회과학자들은 그 사회의 시대적 소명과 필요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한국의 여러 사회과학자들이 이 땅에서 내 것이 아닌 ‘미국학문’을 하면서 자신이 학문적으로 ‘첨단’, ‘선구’에 있다고 자부하는 게 못마땅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과학의 자아준거성을 강조하며, 한국사회가 목마르게 필요로 하는 분야와 과제가 무엇인가를 발굴하는 데 힘썼고, 그들 주제에 대해 개척적 연구에 주력했다. 권위주의·발전주의 국가에 의해 산업화가 주도되고 성장담론이 지배하던 1970년대부터 한국사회의 분배와 복지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국가 이론과 복지행정 분야에 선구적 연구를 한 것이나, 시대에 앞서 북한연구 및 공산주의체제 비교연구를 개척한 일, 한국 행정학의 한국적 맥락을 강조하며 한국행정의 체계적 연구와 이론화에 앞장선 일, 이후 이어진 조직 내 민주주의와 탈(脫)관료제 연구 시리즈, 그리고 장관 재직 때부터 시작한 교육복지에 대한 선구적 연구 등이 그것이다.

### ③ 학문간 벽 허물기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실제로 모든 게 한데 얽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돌아가는데, 학문이 분야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나누고 칸막이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전공이나 학과의 벽을 넘어 학자생활을 해온 편이다. 따라서 나는 행정학자이며, 정치학자이고, 사회학이나 정치경제학도 남의 영역이라고 느껴보지 않았다. 역사와 철학도 늘 함께 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몰입했던 분야도 다양하고, 나름 꽤나 넓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학문적으로 한 우물만 깊게 파는 경우에 비해 힘겹고, 에너지 손실도 컸다. 그러나 일찍부터 시작한 이러한 ‘융합’과 ‘통섭’ 연구방식은 내게 학문하는 재미와 희열, 그리고 의미를 배가시켰다.

#### ④ 이론과 실천의 접목

나는 학문을 하면서 이론과 실천을 의미 있게 엮는데 관심을 많이 쏟았다. 특히 순수학문의 성격이 짙은 정치학과 실천과 실용에 역점을 두는 행정학을 즐기롭게 접목시키려고 애썼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보다 역동적이며 살아있는 학문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과 이러한 연구가 우리 생활세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연구자세가 내 의식을 항상 깨어있게 했다. 내심 주저하면서도 두 번 장관직을 맡았던 것도 바로 이런 일련의 이론과 실천을 접목하려는 욕구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 논점은 아래에서 재론한다.

#### ⑤ 권력과 돈, 연고와 거리두기

나는 권력과 돈, 그리고 연고와 거리를 두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두 번이나 장관을 지낸 사람이 권력과 거리를 두었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지 모르나, 내 평생 현실정치의 자장(磁場) 근처에서 맴돌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 정부와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이지만, 정부 용역을 극력 피했고,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는 더욱 그랬다. 아울러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주범이라고 여겨, 이러한 음습한 사회관계의 늪에서 스스로를 멀리하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이(利), 불리(不利)를 따지기보다 의(義)와 불의(不義)를 가리려고 애썼다. 검약과 절제를 생활의 모토로 하면서, 가능한 한 내 말/글과 행위/삶의 양식 간의 괴리를 줄여 보려고 노력했다.

## V.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나는 행정학과에 등지를 틀고 평생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지만, 연구내용으로 따지면 '정치학 바탕의 행정학' 내지 '행정학과 함께하는 정치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정치학과 행정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많은 경우 양자를 연계융합, 통섭하는 식의 공부였다. 그러면서 내가 고집스럽게 정치학이나 행정학 어느 한쪽을 고수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은 걸 잘 했다고 생각한다.

정치학은 보다 본질학문에 가깝고 이론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행정학은 실용학문의 속성이 뚜렷하며 실천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정치학과 행정학은 학문체계상 분류일 뿐이지, 살아있는 정치와 행정의 세계는 서로 이어지며, 상호 교호하고 보완한다. 따라서 행정을 외면한 정치나, 정치와 무관한 행정은 생각하기 어렵다. 학문의 세계에서든 정치학과 행정학의 통섭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치중하느냐에 따라 이론과 실천 사이를 오가게 된다. 나는 이론에 크게 기울어지면 실천 쪽이 허전하고, 실천에 역점을 두면 이론 쪽이 아쉬워서 평생 양쪽을 바쁘게 오갔다. 그러다 보니 이 나이가 되었다.

1970~1980년대 엄혹한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행정학자가 행정학을 '관리기술학'으로 협의로 정의하고, 그곳에 도피하면

서 정치세계와는 무관하게 행정의 능률문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연구방식은 행정학을 권위주의 정치의 시녀로 만드는 것임을 역설했고, 시종일관 정치적 민주주의 없이는 민주행정, 공정행정, 좋은 행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특히 1970년대 말~1980년대에 걸쳐 언론매체에 체제 비판적 정치평론을 100편 가까이 쓰면서, 민주화를 위한 교수서명에 앞장섰다. 이렇듯 시대와 함께하는 실천적 지성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체제변혁 운동이나 현실정치의 세계와는 가까이하지 않았다.

## VI. 두 번 국정에 참여하다

나는 체제민주화가 이룩된 이후, 마치 운명처럼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 수장으로 두 번(1995년 12월~1997년 8월, 2003년 12월~2005년 1월)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장관은 정치와 행정이 만나는 접점에 자리하고 있어, 대통령/청와대, 국회, 정당, 언론,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부처 관리의 책임을 두루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백면서생인 나는 나라일에 관여하면서 실로 필살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천의 장에서 실험, 검증하는 값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장관이라는 직책은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 자리이자, 동시에 행정학자로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절호의 '공부' 기회였다. 두 번, 그것도 보

수 정부와 진보 정부에서 장관직을 고루 수행하면서, 나는 책이나 이론으로 익힐 수 없었던 ‘살아 있는’ 공부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다. 학자의 국정 참여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권력추구나 자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나라 사랑과 국정 기여의 열망, 그리고 학문적 탐구욕에서 비롯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력에 예종(隸從)하는 대신 학자적 양심과 자존을 잃지 말아야 하며, 자리에서 물러난 후 공직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충분히 학문 세계에 환류(還流)해서 공직에 참여한 학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 번의 장관직 체험을 바탕으로 2015년에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공저, 다산출판사)을 펴냈다.

2004년 가을 내가 참여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야기다.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끝낼 즈음이었다. 어떤 기자가 내게 물었다.

“장관님, 제가 보기에 장관님은 ‘노무현 코드’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코드십니까?”

나는 곧장 서슴없이 대답했다.

“저는 국민코드입니다.”

그러자 ‘와’하고 웃음이 터졌다. 그들은 내가 그냥 농담하는 것으로 느낀 듯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내 진지한 낯빛을 보고 그들의 웃음기



는 빠르게 걷혔다. 나는 다시 힘주어 말했다.

“저는 국민코드입니다.”

예상했던 질문도 아니었고, 준비했던 대답도 아니었다. 그런데 대답을 하면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두 번의 교육부 수장을 지내는 동안, 나를 임명한 두 대통령과는 아무런 정치적 연분이 없었기에 얼마간 운신이 자유롭다는 이 점이 있었으나, 대신 청와대나 당, 정, 그 어디에도 마땅히 터놓고 의논할 상대나 나를 지지해 줄 세력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치 홀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경우가 많았다. 1997년 3월 ‘초등영어’를 도입할 때, 2004년 4월 ‘EBS 인터넷’을 출범할 때, 같은 해 봄 ‘교원평가’를 처음 공표할 때, 그해 10월 말 ‘2008년도 입시개혁안’을 발표할 때 등과 같은 중대한 발표나 시행을 앞두고 그 전날 밤은 예외 없이 하얗게 지새웠다. 역사의 하중(荷重)에 눌러 한숨도 못자고 밤새 뒤척이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그런 가운데, 나는 장관 퇴임 후 ‘깨끗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대학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표 외에 정치적으로 아무런 다른 욕심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내 갈 길을 분명하게 정했다.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말고 ‘국리민복(國利民福)’만을 염두에 두고 나라의 미래만을 고민하자, 그리고 ‘일’로 승부하자는 결의가 그것이었다. 무엇보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영역은 적어도 당리당략이나 이념적,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 기본적인 입

장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결심을 실천하기는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았다. 주요한 정책 결정에는 늘 크고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당, 정, 특히 청와대와의 정책조정과정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나는 그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내 책무이자 운명이겠거니 생각했다.

내가 이해하는 ‘국민코드’는 한마디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관점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고뇌가 함께 담겨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필자는 무릇 한 나라의 교육정책의 거시적 틀은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수월성’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형평성’을 슬기롭게 조합한 중도지향의 정책혼합(policy mix)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김영삼 정부는 수월성 쪽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형평성 쪽에 과도하게 치우칠 개연성이 컸다. 나는 색깔이 다른 두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제를 크게 고심했다.

나는 교육의 중심을 잡기 위해 내심 아래와 같은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는 정권의 수명을 넘어 지속가능한 정책 및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치 굳건한 주춧돌처럼 교육의 근본을 바르고 튼튼하게 만드는 백년대계 지향의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이념적 성향이 다른 새 정권이 들어서도 감히 그것에 손대지 못할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두 번째는 교육정책의 거시적 틀이 수월성과 형평성 중 어느 한 쪽에 기울는 경우, 다른 쪽을 적절히 보완하여 전체적 균형을 잡자는 것

이었다.

세 번째는 절실히 필요한 정책임에도 이념이나 정치적 이유로 추진이 미뤄지는 경우, 그것을 찾아 과감히 밀고 나가자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권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경우, 사표를 걸고서라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자는 것이었다.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을 내 놓았다. 이 방안은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 그리고 공급자위주의 한국교육의 기존 패러다임을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등 문명사적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야심찬 역사적 작업이었다. 이 개혁안의 창안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와 두 사람의 발군의 경제가(經世家) 이명현(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과 박세일(청와대 수석)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 1995년 말, 한 발 늦게 장관이 된 나는 이들 개혁안을 정책으로 다듬어 집행하는 책임을 맡았다. 수많은 정책사업 중 내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교육 정보화사업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및 초등영어 도입이었다. 교단선진화 사업 및 ‘에듀넷(EduNet)’(1996)을 시발점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정보화사업은 이후 한국 교육현장을 폭발적으로 변화시켜, 오늘날 한국을 e-러닝 세계 선도국가로 이끌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제도도 학교민주화의 촉매제가 되었고, 초등영어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5.31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은 20년이 지난 아직까지 한국교육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은 그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시대적 기류의 영향 아래 얼마간 형평성에 비해

수월성에 치우쳐 있었다. 나는 전체적 균형과 조화를 위해 형평성 차원의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복지’라는 블루오션을 찾아 나섰다. 고심 끝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복지종합대책’(1996)을 수립했다. 위의 대책 중 ‘중도탈락자 대책’은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대책’(1997)으로 발전하면서, 대안학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속에서 2004년 탈북 새터민 자녀들을 위해 ‘한겨레 학교’의 창설을 주도했다. 그 일을 하며, 나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벅찬 감동을 느꼈다. EBS 수능방송의 도입(1997)과 인터넷 서비스로의 전환(2004) 또한 교육소외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는 관점에서 내가 설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반면, 노무현 참여정부는 수월성보다 형평성에 관심이 컸다. 따라서 거시적 정책지형에서 볼 때, 수월성 교육의 결손이 우려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전체적 균형과 조화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경주했다. 나는 우선 정권의 가치지향과 궤를 같이 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했다.

다른 한편, 나는 2004년 2월 초, 당·정·청은 물론 교육부 고위 간부와도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그간 금기시되었던 ‘교원평가’ 시행의지를 전격적으로 표명했다. 우리나라 교원의 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교육쇄신을 이루기 위해 교원평가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후폭풍은 대단했다. 전교조의 저항이 치열했고, 대통령도 우려의 뜻을 비쳤다. 그러나 나는 강력추진 의사를 전혀 굽히지 않았다. 교원평가를 교원양성체제 및 교원연수체제 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총체적인 ‘교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

다. 2005년 1월, 교원평가에 대한 정책연구가 크게 진척되어 그 윤곽이 드러날 즈음, 나는 부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후 교원평가 논의는 한동안 동면기로 접어든다.

2004년 12월 말, 참여정부의 이념적 지향과는 거리가 있는 ‘수월성 교육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및 당정과 정책협의를 거치면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 그 과정을 생략하고 보고형식만 갖춘 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길을 택했다. 그 주된 내용은 자질이 뛰어난 학생을 일찍 선발하여 그들에게 ‘맞춤식 개별화 교육’을 하자는 전형적인 수월성 강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형평성 지향의 평준화 교육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적절히 보완하는 것이며, 형평성과 수월성의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것임을 크게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민중주의적/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한때 ‘국립대학 공동선발제’와 같은 혁명적 제안을 구상하였고, ‘수능 5등급’이라는 극단적 접근을 시도하는 등 시종 지나치게 편향된 이념적 성향을 드러냈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던 가운데, 양자의 갈등은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을 둘러싸고 극적으로 분출했다. 오랜 논란 끝에 수능 9등급화에 합의했으나, 청와대, 혁신위, 여당은 1등급 7% 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볼 때, 7%는 아무런 타당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이념적 잣대에 의한 정치적 비율이었다. 정규분포(正規分布)를 상정하면 1등급은 당연히 4%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 최소한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는 사표 제출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에 맞섰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가 설정했던 마지노선인 1등급 4% 안을 관

철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처럼 어렵게 빛을 본 이 개선안은 2007년 말 겨우 한번 시행된 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의해 아무런 공론화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진보정권이 마련한 개혁방안에 대한 소아병적인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화가 나고 안타까웠으나 별 도리가 없었다.

두 번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처럼 정권의 이념이나 정책 성향이 내가 추구하는 ‘국민코드’와 어긋날 때가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아무런 정치적 후원세력이 없는 나는 늘 단기(單騎)로 외롭게 난관을 돌파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크게 고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부 직원들이 고비 고비마다 어김없이 내 뒤에서 주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전폭적 신뢰와 지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감히 ‘국민코드’를 표방할 수 있었겠는가.

## Ⅷ. 인생 삼모작을 시험하며

나는 10여 년 전부터 ‘인생 삼모작’을 주창해 왔다. 첫 번 일터에서만 30년가량 열심히 일하고, 50대 중반에 이르면 진즉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일, 혹은 진정으로 보람되게 생각하는 일에 65세~70세 까지 정진한다. 말하자면, ‘경성(硬性)의 일’에서 ‘연성(軟性)의 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못자리를 아예 시골로 옮겨 ‘자연회귀’, ‘자아 찾기’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냐는 내용이다. 어른이 된 이후의 생애주기를 ‘생계위주’로부터 점차 ‘가치지향/의미지향’으

로 옮겨 보자는 얘기도 된다. 그러나 이는 ‘원형’ 모형일 뿐, 실제로 사람과 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는 평생직업’, ‘학자에게는 정년이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학인(學人)의 경우 직업을 바꾸는 식의 못자리 변경 대신에 공부의 내용과 접근방식을 바꾸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인문·사회과학자의 경우, 중년을 넘어서부터 학문의 경계를 넘어 인접학문과 폭넓게 통섭하면서, 미시에서 거시로, 실증분석에서 질적 연구로, 기능주의에서 본질추구로의 전이를 이룬다면, 그것이 학문세계에서의 두 번째 못자리 이동이라고 본다. 그 과정을 통하여 사유의 세계를 ‘보다 넓게, 깊게, 그리고 유연하게’ 가꾸면서, 보다 높은 경지의 지적 통찰력과 영감을 추구하는 세 번째 못자리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나는 인문·사회과학자에게 60세~75세가 학문연구의 절정기·전성기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 연령대가 갖가지 공적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간 축적한 학문적 역량과 다양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담아 글을 쓸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한다. 큰 학자들의 대작들이 노년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자연은 지적 영감과 통찰력, 그리고 삶의 활력을 선사하는 최상의 화수분이므로 인생설계의 세 번째 못자리를 시골로 옮기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 노후에 시골에 가서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가능하면 서울서 멀리 떨어진 변방, 주변부로 가서 한가로운 중심부를 바라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래서 정년하자마자 이곳 속초/고성으로 내려온 지 12년이 되었다. 처음 1년 여 동안 소도시 속초에 살다가, 좀 더 위쪽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로 옮

겨와서 본격적으로 세 번째 못자리를 실험하고 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인데, 자연은 사람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것도 깊게, 그리고 치열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신비의 힘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여름에 농사짓고, 겨울에 글 쓰는 비교적 단순한 생활리듬에 따라 사는데, 농한기 몇 달 집중적으로 작업하면서도 대체로 2, 3년에 책 한권씩 내고 있다. 내가 서울에서 세상을 마주하며 부대끼고 살았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변변치 못하지만 내 저작들은 한여름 땀 흘리며 농사할 때 문득 문득 떠올랐던 술한 영감들이 가을빛에 영글어 만들어 낸 수확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세 번째 못자리도 앞의 못자리들에 못지않게 다분히 생산적이라고 믿는다.

인생 삼모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선 못자리에서 터득한 지식과 사유방식, 온갖 삶의 체험들, 그리고 그것들이 빚어 낸 빛과 그림자를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한껏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경우, 역시 대학과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학습들, 거기서 움뚧던 술한 통찰들, 그리고 함께 엮힌 회한들과 성찰이 이 세 번째 못자리의 기름진 토양이라고 생각한다.

#### Ⅷ. ‘대안 찾기’ 여행은 계속된다.

나는 원래 정석(定石)적 사고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다. 무엇보다도 고정관념이나 상투어 같은 ‘클리셰(cliche)’를 무척 싫어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하는 것도 똑같이 행동하거나 공인된 해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열심히 미지의 블루오션을 향해 ‘대안 찾기’를 해온 편



이다. 거기에는 주류가 되기보다는 비주류에 속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행동경로의 탐색과 숨어있는 보물찾기를 즐기는 내 성격 탓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대안들은 새로운 해법이거나 바른 길의 모색이었을 뿐, 상궤(常軌)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변혁적’이거나 ‘일탈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나는 또한 극단적인 것을 혐오한다. 그래서 나는 진리독점을 공언하고, ‘적과 동지’를 칼날처럼 가르는 좌와 우의 교조주의자들을 경멸한다. 그래서 늘 중도에서 외롭게 길을 찾았다. 내가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제 3의 길’과 슈뢰더(Gerhard Schröder)의 ‘신중도’,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개념에 크게 기울고, 『역사 앞에서』의 김성철과 『광장』의 최인훈이 보여 준 가슴 저미는 시대적 고민에 크게 공감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선택지를 선택할 때 깊게 고민한다. 그러나 일단 마음이 정해지면, 크게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택했다. 돌이켜 보면, 나의 대안 찾기 여행의 출발점은 위에서 말한 1965년의 오스트리아 유학이었다. 나는 그때 대국주의와 시류편승을 거부하고 변방의 작은 나라를 유학지로 택했다. 내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 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육복지’라는 블루오션을 찾아 나섰다. EBS 수능방송과 대안 학교를 지원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두 사업은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거슬러 과감하게 시도했던 교육정책의 대안 찾기 운동이었다. 이후 ‘교육복지’라는 개념이 교육정책과 교육담론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나의 대안 찾기 여행의 최근판은 역시 ‘탈(脫)서울’이 아닐까 한다. 2006년 정년퇴임에 한발 앞서 나는 서울을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속초로 왔다. 내가 서울을 떠난 가장 큰 이유

는 스스로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였다. 얼마 후 속초에서 다시 시골(고성)로 옮겨 새 집을 짓고 농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꿈꾸던 자연의 품에 안겼다.

나는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적 격류 속에서 자칫 휩쓸리거나 소홀이 되는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며,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1986년 대학가 변혁운동의 파고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른바 주체사상과의 주도 아래 체제는 크게 흔들리고, 온통 '평등'의 물결이 넘실댔다. 나는 '세계의 시계'에 역행하는 이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를 적시하기 위해, 그해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론』(전예원)을 펴냈다. 운동권 학생들로부터 거센 공격과 비판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1980년대 말 소련 및 동구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하자,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 사조가 팽배했다. '자유'가 과도하게 앞세워지면서 '평등'은 뒷전으로 크게 밀렸다. 나는 자유와 평등의 균형과 조화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나남)을 펴냈다.

나의 최근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에서 벗어나 참된 의미의 '중도'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대안 찾기' 여행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 IX.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내 서재 한 쪽에는 오랜 친구 정현중 시인이 손수 써준 그의 명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이라는 액자가 걸려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의 시구처럼 “모든 순간이 다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였다. 다만 이루지 못한 것은 “내 열심”이 부족하거나 내 능력이 부쳤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실로 많은 이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국내외의 많은 은사들, 멀리서 내가 경모했던 어른들, 따뜻한 이웃들, 언제나 힘이 되어 주는 좋은 친구들, 고맙고 자랑스러운 술한 제자들, 그들 모두가 내게 더할 수 없는 지원군이였다. 그들은 또한 모두 내게 도덕적 압력집단이였다. 나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나를 모질게 억누르고, 자주 성찰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어 마지막으로 적는다. 얼마 전 제자 한 사람이 내게 “선생님, 일생에 꼭 하고 싶으신 일인데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하고 물었다. 내 대답은 아래와 같았다

“1950~1960년대의 ‘사상계’ 같은 시대를 고민하는 잡지를 하나 만들고 싶었네. 그리고 매달 나라의 앞날을 밝히고 젊은이들의 영혼을 흔드는 권두언을 쓰고 싶었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신기하게도 나는 평생 20대에 마음에 담았던 세 가지 직업 즉, 학자, 언론인, 그리고 공직자 세 가지 갈래 길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누가 내게 “장관님 운운”하며 말을 건네면, 나는 황급히 “그냥 교수라고 부르세요. 그게 제 진짜 호칭입니다”라고 바로 잡는다.